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평화:
미·중·일 관계와 한반도

이 성 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평화:

미·중·일 관계와 한반도

목 차

I. 문제의 제기	1
II.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이론적 배경: 장주기이론과 패권안정이론	2
III. 동아시아 전략구도: 두 종류의 위험	5
1. 냉전질서의 잔재	6
2. 탈냉전 질서의 불안정성: 양극과 다극질서의 혼재	10
3. 동아시아의 질서의 전개: 두 가지의 가능성	15
IV. 결론: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	26
참고문헌	31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는 새롭게 대두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다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역내 국가들의 첨단 군사력의 강화와 군비경쟁의 추세, 역내 패권경쟁에 따른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돌파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략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대륙국가로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준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전략적재균형 정책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검색어: 군비경쟁, 동아시아, 미중관계, 봉쇄정책, 장주기, 패권안정

I. 문제의 제기

국제정치의 이론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 즉 평화의 달성이다. 평화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적극적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적 정의의 구현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군사적인 대치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다. 안전보장의 당사자의 확대와 안보전략의 변화 그리고 안보영역의 확대로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탈냉전기로 접어들면서 다자안보에 대한 논의가 일반화되면서 안보의 개념이 개별국가중심의 국가안보에서 공동안보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군사적 접근을 넘어 경제, 자원, 환경, 인권 등의 영역을 망라하는 포괄적 안보 그리고 인간안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안보에 대한 인식이 공동, 포괄, 인간중심과 같은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유용성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안보에 있어서 군사비 경쟁은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의 주요 강대국이 실제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들 사이에 전략적인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역외국가인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시기부터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지만 초강대국으로 대결을 벌여왔다. 탈냉전기에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미국은 여전히 동아시아에 전략적 및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적 측면을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다. 북한은 경제적 실패로 인해 재래식 군비에서 남한과 지속적인 군비경쟁을 유지할 수 없는 국력의 한계에 봉착하자 핵무기에 의존하는 비대칭 군비전략에 의존하게 되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 보유함으로써 남한의 우월한 재래식 군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는 동아시아 평화에 새로운 안보불안요인으로 부상하자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시급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국가통

합 즉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영원히 배제하는 방안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군사적 충돌의 재발을 방지하는 평화의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평화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군사적 도발과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억지(mutual deterrence)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중국, 일본을 주요 행위자로 전개되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의 현상을 국제정치이론인 장주기이론과 패권안정이론에 기초하여 논의한다.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이 군비경쟁을 통해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에 대해 조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동아시아 군비경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이론적 배경: 장주기이론과 패권안정이론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제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강대국의 힘의 분배에 중점을 두고 논의해왔는데 국제정치 체제이론은 정태적인 관점에서 체제의 안정성을 논의하였으나 장주기(long cycle)이론과 패권안정(hegemonic stability)이론은 국제정치 구조의 변수를 국제정치체제뿐 아니라 국제경제체제에서의 안정성까지 확대하여 국제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역동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한 설명을 장주기이론과 패권안정이론을 통해 조망하고자 한다. 세계 체제 자원의 힘의 분배가 원인이 되어 세계적인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장주기이론은 서구의 패권경쟁 과정에 일정하고 확실한 반복적 경향을 강조했다. 근대 세계체제에서 발생한 다섯 번의 세계전쟁의 발생에 관련 강대국들의 힘의 부상과 쇠퇴의 과정이 규칙적으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인도양 전쟁(1494-1516), 스페인-네덜란드 전쟁(1580-1609), 대동맹 전쟁(1688-1713), 나폴레옹

전쟁(1792-1815), 그리고 제1·2차 세계대전(1914-1945). 장주기이론에 따르면 100년의 기간 동안 세계체제를 구성하는 국가들 중에 국력의 상대적 규모에 따라서 패권국가와 도전국가로 역할이 구분되는 데 이 양 국가들 사이의 상대적 힘의 변화에 따라 4가지 국면이 전개되면서 하나의 주기가 형성된다고 본다.

장주기를 구성하는 단계에는 첫째, 대결정(macro decision)의 단계는 패권국가와 도전국가가 세계체제 수준의 전쟁을 통해서 지도력을 결정한다. 둘째, 이행(implementation)의 단계에서는 세계의 지도국가로 부상한 국가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 셋째, 안건설정(agenda setting)의 단계는 기존의 도전국가가 지도국가의 지도력 정통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기존질서에 대한 비정통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연합(coalition)의 단계는 지도국가의 정통성과 지도력이 사퇴함에 따라 도전국가들의 새로운 연합이 활성화되는 단계이다 (Modelski and Thompson 1989, 24-25).

장주기이론은 힘의 분배에 따른 세계 정치체제의 특징과 세계전쟁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특성이 있지만 사실상 핵심은 지도국가의 지위의 결정과 유지가 더 중요한 이론적 측면이다. Gilpin의 패권전쟁의 설명에 따르면 지도국가 또는 패권국가가 체제의 질서와 안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최고의 이익을 누리면서 체제를 지배해나간다. 패권국가의 질서 유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잉여이익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감소한다. 장기적으로 패권국가의 비용과 이익 구조의 불균형으로 상대적 지위에 침식이 발생하게 된다 (Gilpin 1987, 86; 1988, 598).

패권안정(hegemonic stability)이론에 따르면 국제정치경제 질서에서 패권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제체제는 안정된 균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패권국가는 타국가의 잉여생산품에 대해 자국시장을 개방하는 능력, 생산투자를 위해 장기적으로 자본을 대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금융위기 상황에서 타국가의 은행에 자본을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Kindleberger 1973; 1981). 패권국가가 주변국에게 시장과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에서 패권국이 성장기에는 개방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경제력의 상대적 분포가 축소되어 패권이 쇠퇴하는 단계에 들어갈 때는 폐쇄성이 증가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 구조적 변화와 무역질서의 변화와의 시간적 격차는 패권의 상승기에 채택된 정책이나 제도가 일종의 관성을 갖게 됨으로써 커다란 외부적 충격이 올 때까지 지속된다(Webb and Krasner 1989).

공공재의 공급에 대하여 패권국 또는 패권적 레짐의 성격에 따라 공공재의 이익을 국제사회의 구성원과 공유되기보다는 패권국에 의해 선택적인 분배가 가능하며 무임승차국이 공공재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권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서 공공재를 활용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적 팽창정책을 선호하고 이를 기초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 권력 기저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 있지만 통제로서의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지 않았으며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 속에서 지속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패권국의 지위는 미국이 공급해온 재화가 공공재가 아니고 사유재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미국이 그 이득을 활용해 패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왔다(Russett 1985, 214).

미국의 권력 기저가 쇠퇴해도 지속적으로 국제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 패권” 때문이었다. 국제관계에서 물질 자원을 활용해 직접적인 강제력을 의미하는 경성(hard)권력보다는 문화, 이데올로기, 제도와 같은 간접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연성(soft)권력의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경성권력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도전국들과는 달리 연성권력의 자원을 소유하고 이를 운용하는 대외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상호의존의 다자주의 국제질서 속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Nye 2005).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권력은 쇠퇴하지 않았고 아직도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오늘날 국가 간의 새로운 경쟁의 게임에서는 현실주의자들이 근거하고 있는 관계적 권력보다는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이 더 중요하다. 미국은 아직도 안보, 생산, 금융, 지식의

4분야에서 압도적인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을 행사한다. 여러 분야의 국제체제의 약화나 미국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약화보다도 이익집단, 로비 등 미국 국내정치 관행이나 정치체제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Strange 1987; 1988).

미국이 패권적 지위의 유지를 강조하는 시각에서 미국의 패권쇠퇴를 강조하는 논의들의 문제는 패권쇠퇴를 강조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점이다. 패권이 쇠퇴한 미국도 통상적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추구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역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국제정치경제의 안정된 질서라는 공공재가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Ⅲ. 동아시아 전략구도: 두 종류의 위험

세계적인 탈냉전의 기류는 전통적 세계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적인 흐름은 동서진영으로 양극화되어 있던 세계질서가 다원화와 국제사회의 다극화로 변화되었음에 반해 동아시아는 여전히 냉전의 유산이 잔존하고 있다는 진단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양극질서의 불운한 유산이 잔존하는 가운데 다극질서의 불안정한 요소는 새롭게 대두하는 이중불안구조의 지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냉전적 균형질서가 흔들리게 되면서 탈냉전의 불균형질서로 대두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의 냉전적 요소도 탈냉전의 불균형질서를 촉진시키는 불안 요소로 전환되어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부정적인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냉전은 전통적 안보분야인 군사적 대결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비군사·비정치적 분야인 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한다고 이해해 왔지만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중·일 간의 경제력 순위의 역전을 가져왔고 이는 중국과 일본의 역내 패권경쟁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세계 전략차원에서 적어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부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그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양극체제, 일초 다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역학구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역내 국가들의 첨단 군사력의 강화와 군비경쟁의 추세, 역내 패권경쟁에 따른 질서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1. 냉전질서의 잔재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세력이 접점을 이루는 전략적 지점으로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양대 진영의 대결구도의 국제질서 아래에 한반도가 남북의 분단국가를 형성하여 군사적 대결의 축을 구성하는 지역질서를 형성하였다. 한반도에서 정전 이후 반세기 이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냉전시기 남북한의 체제경쟁과정에서 군비경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군비확충과 무력증강을 통해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불안정하지만 전쟁의 발생을 억지하는 상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탈냉전이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에도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여전히 공포의 균형이 강화되는 과정에 불안정한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으로 남북한의 체제대결에서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자 북한은 대외적으로 남한과의 재래식 군비 경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대내적 체제실패로 인해 지배질서를 유지하는데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국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비대칭 군사력 확보 전략을 선택하여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하는 전략무기 개발로 대남 및 대미 군사적 억지력은 물론 국내적 정치불안으로부터 정권의 생존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아시아는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한 군사적 모험주의로 인해 탈냉전 이후에도 냉전적 요소가 여전히 군사적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게 되었다.

1993년 3월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는 북한 국방전략의 선화를 알리는 선언적 사건이었다.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주의의 중추

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동구국가와 지속적인 외교적 확대를 추구해온 노태우 대통령의 퇴임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1993년은 북한에게는 대외정책과 국방정책의 선택의 전환점이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국내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김일성은 정책적 돌파구를 모색하는 과정에 개혁개방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두 가지 대안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북한을 포함한 최초의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개발사업은 국제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의 후원을 얻어 부분적으로나마 북한에 개혁개방의 모델을 적용해보려는 정책적 시도였으나 결국 북한은 체제의 취약성 때문에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의 체질 개선보다는 핵무기 개발이라는 폐쇄적 대결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3년까지 총 3회에 걸친 지하핵실험을 수행하면서 15여 년의 준비과정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북한의 3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폭발력의 증대와 함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에 성공했다는 발표는 북한의 핵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93년 5월 29일 사정거리 1,300km급의 노동 1호 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1998년 8월 30일 사정거리 1,700-2,200km급의 대포동 1호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경계를 고조시켜 미국과 일본의 MD체제구축을 위한 양자협력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여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가 넘는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 배치해 미국령인 괌까지 사거리 안에 포함시키게 되고 2012년 12월에는 미국 서부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만km 이상의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2087호)를 통과시켰다.

북한은 포괄적인 일괄타결의 합의를 통해 9·19 공동선언¹에서 나타난 바와

¹ 9·19 베이징 성명은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 이행하는 대가로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추구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전력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북한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인정하여 경수로를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6자회담 당사국이 공동의 노력을 하는 데 합의하였다.

같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대미 강경대응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미국이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서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신뢰성 있는 행동을 선결조건으로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동아시아에서 대결적 냉전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북한 혼자의 힘으로라도 저지하는 것이다.

북한이 냉전질서에 의존하는 것은 몇 가지 정책적 의미가 있다. 첫째,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만큼 미국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김씨 일가를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지배집단은 미국의 존재자체와 군사적 위협이 북한 정권의 존재의의와 북한의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기 보다는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냉전적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활용하려고 한다.

둘째, 북한은 국가실패로 인해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보다는 대외원조를 얻어내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력의 재건은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가로 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무상 원조는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 보유는 국내정책적 효용을 가진다.

셋째, 북한은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국내정치에 활용한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하여 북한 정권은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난은 북한 정권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적대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어 내야 한다고 주민들의 인내와 노력 동원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북한의 핵 개발은 탈냉전의 동북아시아 지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역내 비핵국가인 한국과 일본에게도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적극적 대응을 시도함으로써 역내 안보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본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앞서 10월 11일 독자적인 제재를 결정함으로써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민감하고 강경한 반응을 보여 주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일본의 대응에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확산되었던 ‘적 기지 공격론,’ ‘핵무장론,’ 그리고 ‘헌법 개정론’과 같은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다.

일본의 자위대가 북한 내부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선제공격능력의 확보는 주변국의 우려와 헌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논의가 잠잠해졌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된다고 핵무장이나 적기지 공격이 현실적인 국방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로 군사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적 전환에 활용할 것이다.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06년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내각의 총리를 시절부터 헌법 9조 개정이 ‘독립 회복’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는 점과 최근 보여주는 보수주의적 행보가 헌법 개정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집권여당의 대표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가하면 여당의 전 대표인 정몽준 의원은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서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우리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식은 국내 여론에서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쉽게 용인할 가능성도 사실상 낮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재래식 군비를 도입하고 있다.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공중급유기 도입을 통한 공군력의 증강과 함께 정밀유도 확산탄으로 알려진 CBU 105D의 도입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의존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이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확대로 연결되는 과정에 미국과 중국은 상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은 북한 핵 제재 결의안에 원칙적으로 동참하지만 실제로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헌장 7장 42조에 근거하여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을 포함하는 군사적 조치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적극적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축과 중국, 러시아,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축이 현상 인식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협력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남방삼각과 북방삼각의 대결구도가 약하게나마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을 계기로 대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를 강화해주고, 일본에게 군사적 역할 부담을 요구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결 축을 형성하고 역내 국가가 가세하는 양상이 명확해졌다.

2. 탈냉전 질서의 불안정성: 양극과 다극질서의 혼재

동북아시아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상호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한·중·일 3국 간의 교역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교역에서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1%에서 2009년에는 26.6%로 성장했고 한국의 교역에서 중국 및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21.9%에서 30.5%로 증가했고, 중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5%에서 2009년 17.4%로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지만 동아시아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송원근 2009). 기능주의적 시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평화론의 시각에서도 국제사회에서 국가 사이에 교류와 협력의 증가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낮추는 반면 통상적인 갈등의 수준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정치 일반이론의 설명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교류와 협력의 확대는

과거 냉전적 구도에서 군사적 대립과 충돌의 가능성을 급격하게 낮추었지만 역내 국가들 사이에 냉전이전부터 존재했던 역사문제 그리고 영토문제와 관련된 국가 간의 갈등이 다시 점화 되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분쟁 패턴은 근대사에 기원하는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가 현재의 영유권 문제와 연계되어 냉전시대에 잠복되어 있던 갈등이 탈냉전의 다원적 질서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일관계의 중심에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일본 지방관서의 행정적 조치가 국제법상 유효한 선점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의 통치적 영역권이 배제되는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일본의 주권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950년 이래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영유권에 대한 갈등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도발이며 역사적으로 19세기말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했던 역사적 범죄행위의 일환이었던 병탄 행위의 일부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독도 문제에 관해 일본의 하시모토 일본총리와 이케다 외무장관은 1996년 초 200해리 경제수역 범위 획정에 독도를 기점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와 같이 양국 간 외교적 현안이 되고 있다(연합뉴스 1996년 2월 11일). 독도 인근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의 순시선이 2004년까지 연간 30~50회 수준으로 출현했고 2005년부터 연간 90회 정도로 증가해 2011년에는 93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 인근에 일본의 도발은 증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년 10월 5일). 2006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군함과 순시선을 포함하여 일본의 함정이 독도 인근해역에 747차례나 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중일관계의 역사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현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였던 센카쿠 열도를 1895년 청일전쟁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무주지라

고 주장하고 일본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킨 것은 불법이며 당연 무효라는 주장이다. 2010년 9월 7일,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중국 어선은 나포되었으며 선장 잔치승과 선원 등 15명이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다(이춘근 2013; Business Insider Oct. 23, 2014). 동중국해 일부 섬들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한참이던 와중에 중국과 일본은 자존심을 내걸고 벼랑 끝 외교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베이징에서 반일시위가 열리고, 양국의 정상회담 계획이 전면 보류되는 등 양국의 대립상황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2010년 9월 23일 중국은 희토류의 일본 수출 중단을 선언하자 다음날인 24일 일본은 구속된 선원을 모두 석방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일본경제의 핵심 산업인 첨단산업에 필수 원자재인 희토류의 수입선 차단은 일본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지배권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사유지였던 열도의 3개 섬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유화 조치의 취소를 압박했다. 국유화 1년이 경과된 2013년에는 중국은 해경함정을 센카쿠 열도의 영해에 진입시키고, 중국 공군 무인 항공기를 수 시간 동안 비행하게 하고, H2폭격기 2대가 오키나와 본 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하면서 일본의 영유권에 대해 항의를 표시했다. 일본은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해 해상보안청 순시선 7척을 투입해 대응하고 특별경계령을 내려 센카쿠 열도 일대의 경계태세를 높이는 등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고조되었다.

한국과 중국 관계는 동북3성 지역과 관련하여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의 변방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국경지방의 소수민족의 독립에 대한 사전예방 정책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동북3성에 대한 한국의 관심,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 그리고 조선족들이 느끼는 정체성 혼란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되었다. 나아가서 남북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국경문제 및 영토문제에 대한 사전포석의 의도가 있으며 특히 북한이 붕괴되어 흡수통일 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미래의 예견

된 상황에 대한 갈등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며 그로 인해서 갈등이 지역질서에 가지는 파급효과가 훨씬 직접적이다.

중국은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의 선포로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문제 등에 있어서 선제적인 공세를 취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질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세계일보 2013년 11월 26일). 중국이 일본과 남중국해의 센카쿠열도에서 분쟁을 주도하는 상황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대외전략에 중요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외관계를 결정하는 2012년 말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중국의 대외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중국의 대외정책이 공세적인 자세로 변화되었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이후 중국은 핵심이익을 규정하고 대외정책의 보폭을 확대하여 남중국해와 다오위다오에서 분쟁을 격화시키면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탈냉전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국면은 냉전시기에는 표면화되지 않았던 해양영토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중심에 있고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발생했던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평화와 협력의 동북아시아 지역질서 형성에 역사문제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사이의 갈등의 촉매제로 역할을 해왔다. 문제의 핵심에는 일본의 역사왜곡이 자리하고 있다. 1993년 일본의 고노 요헤이 장관이 담화를 발표하여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 당국이 간여한 위안소의 광범위한 존재, 그리고 한국민에 대한 강압 등을 시인하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사죄한 이른바 고노 담화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근대사에 있어서 일본의 침략과 인도적 범죄에 의해 피해를 보았던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역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사죄를 계속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일본 정치 지도자는 보수화 경향에 편승하여 2013년 말 아베 총리는 A급 전범의 위폐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위안부 문제를 2차 세계대전 참전

국 어느 나라에나 있던 일반적 상황으로 주장하거나,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들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역사적 수정주의를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4년 2월 24일).

중국은 일본의 역사적 수정주의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3월 시진핑 주석이 독일에서 공개강연을 통해 난징 대학살을 지칭하여 일본의 군국주의가 난징시를 침략하여 30여 만 명의 중국 군인과 민간인을 도살하는 전대미문의 참상을 저질렀으며 그때의 일은 지금도 중국인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2014년 3월 30일). 과거 장쩌민 국가주석이 일본 침략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3500만 명 그리고 난징 대학살의 사망자가 30만 명 이상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역사문제에 대한 갈등은 영토문제와 결합되면 여론의 폭발력에 있어 국내정치적으로 상승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유권 문제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침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적 야심은 역사적 인식의 오류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적어도 한국과 중국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역사적 인식의 오류는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전개되는 양자관계 및 다자관계의 협력관계가 냉각되어 관계의 진전이 중단되거나 후퇴하게 된다.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언은 한일관계의 협력을 중단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중일관계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역사갈등과 영토갈등은 기존 냉전시기부터 형성되어온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동맹구도에 변형을 유도한다. 역사적 가해자인 일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인식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남북삼각협력에 균열이 초래된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2012년 아베 내각이 다시 출범하면서 대외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위한 외교정책과 이를 위한 우경화 정책의 국내정책이 결합되면서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 영토문제를 격화시키고 과거사 문제에도 수정주의를 강화하자 중국과의 관계악화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국과의 갈등을 고조시켰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역사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지나친 우경화 경향은 한·미·일 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응하려는 3국의 공동이익 및 전략·전술의 차원에서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이 동아시아에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자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반대 입장을 취했다. 2011년 말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귀환(Return to Asia)을 표방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경계는 본격화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재균형(re-balancing)으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협력구도는 국제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다자 기구, 글로벌 금융시스템, 핵, 사이버 안보, 우주,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아시아 안보 등 광범위한 국제관계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가 바로 이러한 정책분야의 승패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의 기초 위에 상호 간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보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국익을 존중할 것을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契)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3. 동아시아의 질서의 전개: 두 가지의 가능성

1) 미·중 경쟁과 미국의 전략

국제질서의 관리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이 아니었다. 미국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적대국가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직접군대를 배치하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지역 내 우방국가를 지원하는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추구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로 전환하였다.

미국이 표명한 아시아 정책의 6가지 주요 행동 원칙에 따르면 외교적인 수사

를 제외하고 나면 아시아로 회귀의 의지가 드러난다: 1) 주요 5개국인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과 양자 간 안보 동맹 강화, 2) 중국을 포함한 부상하는 국가와의 유대 강화, 3) 지역 다자기구와의 교류, 참여 확대, 4) 무역 및 투자 증대, 5) 광범위한 (broad-based) 군사력 배치(military presence), 6) 민주주의와 인권 증대. 미국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은 동아시아로의 회귀에서 재균형(rebalancing)전략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와 군사적인 봉쇄가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의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하는 개념에서 한 곳에서 전쟁 수행과 다른 곳에서 도발세력의 도발 의도를 무력화 시키는 개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따른 전략개념의 수정은 미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비 감축 압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서 미국의 전략 수정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미국이 공세적인 자세에서 수용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표 1〉 미·중·일 명목 GDP

(단위: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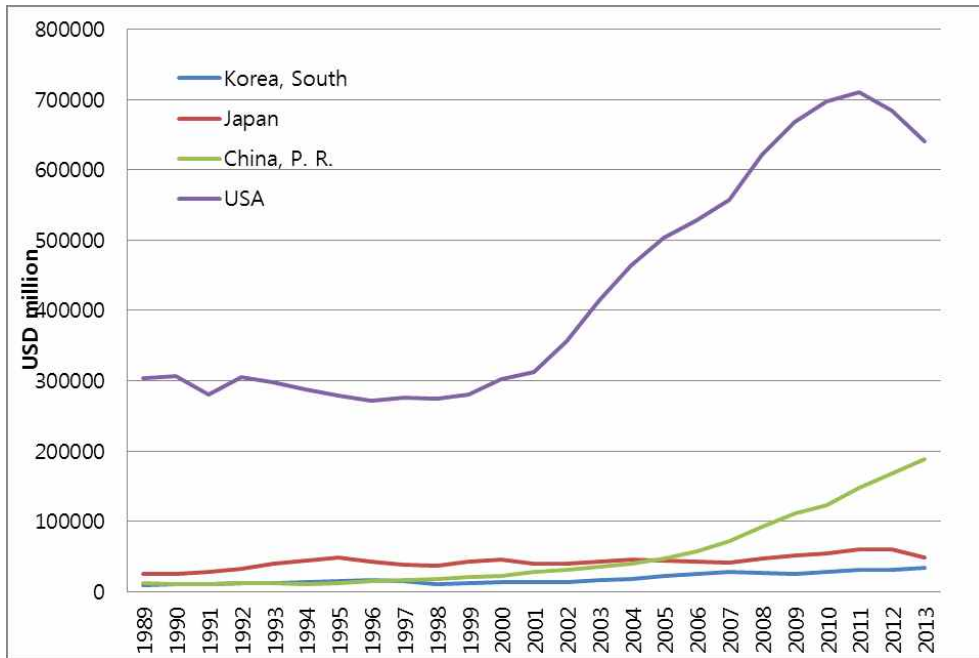
연도 / 국가	미국	중국	일본
2008	14조 2193억	4조 5218억	4조 8492억
2009	13조 8983억	4조 9913억	5조 351억
2010	14조 4194억	5조 9498억	5조 4954억
2011	14조 9913억	7조 3144억	5조 8968억
2012	15조 6848억	8조 3584억	5조 9597억
2013	16조 7242억	8조 9393억	5조 72억

출처: IMF Data and statistics homepage-<http://www.imf.org> World Economic Outlook Data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직접 투사되는 미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차단하는 이른바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전략을 수행해왔다. 경제력 측면에서 세계2위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신형대국관계의 설정을 요구하면서 국가의 위상에 부응하는 위상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9월 중국이 발표한 화평발전보고서에 나타난 중국의 핵심 이익은 1) 국가주권, 2) 국가안전, 3) 영토안정, 4) 국가통일, 5) 중국의 헌법을 확립하는 국가정치제도와 사회대국의 안정, 6)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초의 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체제와 지역 질서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미·중·일·한 군사비 추이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milex_database/milexdata1988-2012v2.xls

미중의 경쟁구도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를 통한 중국 봉쇄와 중국의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의 충돌 현상인데 이러한 동아시아의 미중 경쟁구도는 장주기이론의 이해에 기초해 해석할 수 있다. 패권국 미국의 지위의 정통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경제력

을 기준으로 미국의 상대적 국력의 축소와 중국의 상대적 부상이 있다. 중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2010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약 5조 9천억 달러를 기록하여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자 동아시아 최대의 경제국으로 부상하였다. 외환보유고에 있어서도 중국은 2006년 일본을 추월하였고,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이 약 3조 2천억 달러, 일본이 약 1조 1천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2000년 초에는 2050년에는 경제규모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여유 있는 예측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0년에는 그 시기가 2025년으로 앞당겨졌다.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를 계속 유지하며 미국은 2% 성장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매년 일정 정도 평가절상되고 미국 달러화는 그에 상응하여 평가절하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2018년, 그리고 IMF의 경우는 2016년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시점이 점점 당겨지고 있다.

〈표 2〉 미·중·일 국방비 지출 및 비중

(단위: USD)

연도 / 국가	세계	미국	중국	일본
2008	1조6051억	6490억 (40.4%)	1068억 (6.7%)	591억 (3.7%)
2009	1조7111억	7011억 (41.0%)	1289억 (7.5%)	597억 (3.5%)
2010	1조7394억	7204억 (41.4%)	1365억 (7.8%)	590억 (3.4%)
2011	1조7410억	7114억 (40.9%)	1462억 (8.4%)	596억 (3.4%)
2012	1조7451억	6688억 (38.6%)	1661억 (9.5%)	593억 (3.4%)

출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www.sipri.org/research/armaments/milex/milex_database/milexdata1988-2012v2.xls

미국의 국력은 경제력 기준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총생산의 50%를 차지했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에는 25%로 하락했고 2007년에는 15%를 기록했고 2008년 재정위기 이후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거대한 경제규모와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질서에 일정한 변화의 압력을 가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예상 국력의 규모를 고려한 장주기이론의 인식 틀에서 동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군사력 분야에 있어서도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64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1880억 달러로 3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총액 규모에서 중국의 군사비 규모는 이미 2004년에 일본을 추월하여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은 486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3배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지출의 격차인데 빠르면 2025년에 중국의 군사비가 미국의 군사비와 같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매년 15.6%씩 증가하고 미국은 군사비가 동결된다는 전제로 나온 것이기는 하다. 중국이 매년 10.7% 수준으로 군사비를 증가한다면 2030년대 중반에는 미·중 군사비가 같아질 것이고 가장 보수적인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2050년을 전환점으로 예측한다 (Rajendran 2013).

〈표 3〉 미·중·일 현역 병력 수

(단위: 명)

군별 / 국가	미국	중국	일본
육군	600,450	1,600,000	151,350
해군	332,800	255,000	45,500
해병대	199,550	(해군에 포함)	-
공군	346,100	330,000	47,100
전략미사일군	-	100,000	-
해안경비대	41,200	(준군사조직에 포함)	-
핵심참모	-	-	3,500
총계	1,520,100	2,285,000	247,450

출처: 김현규, 2014.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다층적 세력전이이론으로 본 중·미·일 삼각구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국은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전략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군사력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 레이저 포, 레일건, 아이언맨 갑옷과 같은 한 차원 높은 신무기를 개발해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력 개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B-52 스트래토 포트리스, F22-랩터,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SBX-1 X밴드 레이더, 샤이엔 SSN773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첨단무기를 소개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3년 9월 20일). 이에 대해서 중국은 공군과 해군에 중점을 두고 신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최대 속도가 음속의 10배(마하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중국의 공군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대안이라는 점에서 미국에게 위협이다(경향신문 2014년 8월 26일). 이 밖에도 초음속 잠수함 개발, 투명망토, 무인함정 개발 등 첨단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 군사력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를 찾아 우주항공 일체화와 공격·방어를 겸비한 강대한 공군 건설을 주문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개발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작전능력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094 핵잠수함에서 쥐랑(巨浪)-2 잠수함 탑재 대륙간 탄도탄 발사실험을 하고 ‘항모킬러’로 불리는 동풍(東風)-21D 탄도미사일을 도입해 미해군의 항모 전단을 위협하는 무기를 갖추게 됐다. 대형 수송기 윈(運)-20의 비행에 성공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200t급 대형 군용수송기를 자체 제작한 국가가 되었다. 스텔스 전투기 쟈(殲)-20, 쟈-31의 시험비행을 계속하면서 중형 폭격기 홍(轟)-6K를 실전 배치하는 등 현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해군 및 공군력의 지속적인 증강 추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첨단 군사력 격차는 당분간 유지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협한 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김태호 2008, 104-105).

미국과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경쟁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봉쇄를 돌파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협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하면서 G2로서 대결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냉전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전략에 비추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중

국의 국방비가 미국의 국방비를 추월하는 시점에 대해서 논의가 많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국의 첨단무기 경쟁이 경제적 부담으로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위협적인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중국은 미국의 지도력과 정통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정통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할 만큼 강해지려는 시도가 중국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미국은 패권국가가 체제의 질서와 안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최고의 이익을 누리면서 체제를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

2) 중일 경쟁과 미국의 패권

중국이 세계전략차원에서 미국과 대등한 경쟁구도를 이루어 G2로서 패권경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의 전개는 중국과 일본이 지역주도권을 경쟁하고 한국이 역할을 모색하는 다자 또는 다극의 구도로 볼 수 있다. 탈냉전기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경쟁은 2005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일본을 추월했지만 경쟁구도는 유지되고 있다.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본격화되었던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군사비는 495억 달러로 세계 3위, 일본은 437억 달러로 세계 4위, 그리고 한국은 213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탈냉전시기에 들어와서도 세계군사비 총 지출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적인 군사비 증가추세가 연 3-4%임에 반해서 동북아 지역은 연 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이다. 2008년에는 미국이 6,070억 달러로 1위 그리고 중국은 849억 달러로 2위로 부상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중국의 군비지출의 증가는 2013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시키고 미국은 이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6,800억 달러에 달하며 미

국의 총 부채는 17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재정부담이 악화되자 미국은 2011년부터 군사비 지출을 줄여 2013년에는 6,400억 달러로 2012년 지출대비 7.8%가 감소했다.

미국은 재정적자로 인해 군사비를 줄여야 하지만 2020년까지 동아시아에 미 해군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대양에서 해군력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유사시에 미군에 대한 대응을 고려한 적극적인 근해방어전략이다(김태호 2008, 94).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군의 군사활동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음과 동시에 미국의 봉쇄정책이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중국 군사비 지출의 증가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및 세계전략에 대항하는 정책적 목표와 동반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순히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국에 대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위성요격용 탄도미사일 개발, 2010년 미사일 요격실험 성공, 항공모함 랴오닝호 운영, 쟈-20스텔스기 개발과 같이 군사강국으로 면모를 다지고 있지만 이러한 개발의 궁극적인 대상은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 경쟁을 벌이는 일본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비확장에 대항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추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신 방위대강』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의 강화와 섬 지역 방위력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한국 및 중국과의 도서영토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2013년 8월 5일). 2013년 기준으로 항공자위대는 4대 보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를 추가로 4대를 확보하여 항공방어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함을 6대에서 8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와 무인 감시기 글로벌 호크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 때문에 ‘종합대응능력’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명백한 군사력 증강이며 아베 신조

정권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본의 국제법적 지위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미·중 무기체계 비교

(단위: 개수)

구분		미국	중국
분류	무기체계		
군사전략적 측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450	72
	폭격기	155	112
	ICBM 장착 핵잠수함	14	4
군사훈련적 측면	포병대	7,983	12,515
	최신 주전투전차	2,785	2,83
	최신 보병전투장갑차	4,559	2,280
	4세대 전술항공기	3,020	913
	5세대 전술항공기	212	-
	공격헬기	865	42
	수송헬기	2,796	237
군사투사적 측면	항공모함	11	1
	순양함/구축함	84	14
	소형구축함	25	62
	핵잠수함	58	5
	주 상륙함	29	2
	수송기	790	64
	공중급유기	528	13
ISTAR 측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4	14
	무인항공기	393	약간
	첩보위성	21	11
	항행위성	30	17

출처: 김현규, 2014.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다층적 세력전이이론으로 본 중·미·일 삼각구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일본 아베 내각은 2014년 7월 1일 내각회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일본과 인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에

게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정해온 헌법 해석을 변경하였다(한국경제 2014년 7월 1일). 아베 내각의 발표에 대해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지를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노력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에 기초해있다.

일본은 최근에 와서 2003년 6월 일본 본토의 유사사태를 상정한 유사법제의 제정, 수 차례에 걸친 자위대법의 개정과 자위대의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파견 시도, 그리고 2004년 12월 방위계획대장 2차 개정에서 미일동맹을 강화와 국제적 안전보장, 실효적 안전보장, 통합적 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냉전질서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일관계의 안보협력의 급속한 진전은 중일관계를 긴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미일방위협력의 강화는 미국과 일본에 의한 대 중국봉쇄정책으로 간주되었다(손기섭 2007, 33-34). 미일 양국이 1996년 오키나와 시내에 위치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온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사안에 합의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18년간 이행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아베 내각은 강력하게 현 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미일동맹을 강화해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전략을 추진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며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의 보수화 및 민족주의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12년 9월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는 과정에 중국과의 긴장을 촉발한 사례가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 직후인 2010년 7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훈련 실시계획을 발표하자 중국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서해 인근인 동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실탄사격훈련을 공개했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로 들여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려던 계획을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동해로 항로를 변경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간주한다. 2010년 6월 28일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3척이 부산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동시에 출현한 사실을 놓고 “미국이 중국 동서남북을 봉쇄하는 ‘보름달형 방위선’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도 캄란만 해군기지를 미국과 러시아의 해군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0년 11월 말에는 서해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맞선 무력시위 성격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공중급유기가 참가하고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스도 투입되었다. 한국군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 함(7600t급)과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I) 2척과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했다. 12월에는 일본 남부 해역에서 미일 양국의 연합훈련이 사상 최대규모로 실시돼 미군 함정 20척 항공기 150여대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40척 항공기 250여대에 양국의 병력 4만 5천명이 참가해 2007년 이후 10차례 훈련 가운데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2012년 6월 한반도 미군의 전력증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아파치 헬기 1개대대와 탄도미사일 방어전력(PAC-3)을 언급하면서 표면적으로 서해 5도 서부전선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전력 확보라고 밝혔다. 남북한 대결구도 속에 한미동맹을 활용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도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양자동맹을 활용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대륙국가로 계속 봉쇄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준은 아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개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도 및 베트남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우방으로 알려진 버마와도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2009년 미국은 대중정책을 함축하여 “전략적 재보장(strategic reassurance)”의 개념을 제시하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대신 중국은 중국의 발전과 그에 따라 급증하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도 다른 국가들의 안보와 복리를 침해

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는 일종의 타협 또는 흥정이었다(Rogin 2009). 미국의 전략적 재보장에 대해 중국은 협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의 제안을 과도한 요구와 압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미국의 정책의지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는 통화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에 대항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견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티베트,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들 중,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전략적 재균형정책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패권주의에 기초해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지배적인 지위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대안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전략문화협회 부회장 루오 유안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가 중국의 힘과 의도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중국을 친구가 아닌 적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오인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위협할 수 없으며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국이 주목하지 못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부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봉쇄정책이 냉전적인 방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Yuan 2011).

IV. 결론: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 중국의 민족주의 경향, 일본 정치권력의 보수우경화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상대적으로 국력의 열세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안보질서의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의 격화를 놓고 동아시아가 시리아와 이라크보다 세계질서에 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 놓기도 했다(Straits Times, Sep. 28, 2014).

중국이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2위를 차지하던 2010년 초를 전후하여 ‘중국의 부상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의미’는 주된 논쟁거리가 되었다. 궁극적으로 논쟁의 결론은 미국과 중국의 힘의 분배가 도달하는 균형점에 관한 것이었다. 학자에 따라서 중국의 미국 추월로 패권전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양극체제를 의미하는 G2, 패권국가가 없는 다극체제를 의미하는 G0 등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힘의 배분의 변화를 설명하는 장주기이론과 패권안정이론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질서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였는데 결국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된다: (1)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 (2) 미국의 패권질서의 존속.

북한 핵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에서 시작해 15년의 준비과정을 통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부터 2009년과 2013년까지 총 3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었다.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도 돌이킬 수 없고 확인 가능한 비핵화에서 사실상 비확산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중국과 일본도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목표로 생각하기보다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비핵화와 대 북한 제재조치에 대해 비협조적인 입장을 택하고 일본은 보통국가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 외부의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 미군의 활동영역을 동아시아로 확대하면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다자적 질서의 혼재는 영유권 분쟁, 역사분쟁, 군비경쟁의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려는 미국 패권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패권질서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안전설정의 단계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안정적 질서가 강화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패권질

서에 도전하기 위한 해·공군력의 군비경쟁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세계2위의 자리를 공고히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국익의 손해를 보지 않는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힘(power)을 어떤 개념으로 해석하더라도 군사안보, 경제와 무역, 금융과 통화, 지식과 정보의 4개 주요 영역에 미국이 전후 수립하고 장악해온 구조적 권력의 틀과 규범적 권력의 틀을 중국이 대치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생산되는 규범은 공공재인 동시에 사유재이다. 패권안정이론의 관점에서 패권국 미국이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규범은 공공재임이 분명하지만 공공재의 이익이 패권국에 의해서 선택적 분배가 가능하게 하여 패권국의 국익을 확대·강화하는데 사용되는 한에는 사유재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패권국의 지위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국 미국의 선택적 분배를 통해 중국이 부당한 불이익을 보지 않는 국제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이 말하는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제시하는 타협안과 중국이 원하는 기대치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중국은 국제경제와 금융에서는 물론 군사안보영역의 주요 주제인 양안관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 북핵 문제 등에서 보다 독자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 허용하는 자율적 정책의 범위는 그다지 넓지 않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패권국가인 미국이 중국에 제공하는 국내시장의 접근은 여전히 중국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추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넓지는 않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호주, 싱가포르, 태국과 동맹에 추가적으로 양자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추격의지를 와해시키는 한편 동아시아 국가로서 세계경제 2위 자리를 향한 경쟁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지역패권국의 지위를 향한 경쟁과정을 촉발시킴으로써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상존하는 냉전질서를 이용하여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적절히 이용하여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연기하고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질서를 통해 미국의 패권질서를 확대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미국은 일본 국내정치에 우경화 경향뿐 아니라 한국 국내정치에 보수화 경향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에 문화적 패권인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국제질서를 통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는 장주기이론이 제시하는 ‘안건설정’과 ‘연합’의 단계가 아니라 패권안정이론이 이야기 하는 패권전략의 지속성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해석된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정책적 선택이 문제이다.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한국의 대안의 논의는 항상 효과적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어 왔다. 동아시아에서 힘의 분배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체제질서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인식해 왔다. 이 바탕에는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의 경쟁과정에 항상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인식이 전후 60년을 지배해 온 것이다. 경제력 규모 면에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1조 4,490억 달러 일본은 4조 7,700억달러 중국은 10조 3,550억 달러, 미국은 17조 4,160억 달러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국력이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국력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수립과 6·25 직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이 결과에 대해 국력을 절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가능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상대적 의미에서 국력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한다. 단기간에 변경은 불가능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을 대비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패권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가 미국 중심 또는 미국 일변도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안으로 주로 논의되는 안보의 주요 파트너는

미국으로 경제의 주요 파트너는 중국으로 상정한다는 나름대로 효과적인 외교 전략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처럼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지위와 전망에 대해서 명백한 의사표명을 통일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생각한다. 동아시아에서 국제관계가 어려운 것은 미국 일변도의 외교는 곤란하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선택은 우리의 선택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반대가 충돌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대안과 경제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미일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한 고려와 대비도 필요하고 중일관계의 상황전개에 따라서 한국이 겪게 되는 경제적 및 안보적 손익관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태호. 2008, “중국의 ‘군사적 부상’: 한국의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김태호 외, 『중국 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과주, 경기도: 나남), pp. 69-123.
- 손기섭. 2007, “동아시아 정세분석: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중관계,” 『동아시아브리프』, 제2권 2호, pp. 31-35.
- 송원근. 2009,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이춘근. 2013, “해양안보 측면에서 평가한 제주 남방해역의 중요성,” 『해양안보학술 회의』, 2013년 2월 7일.
- Gilpin, Robert. 1988, “The Theory of Hegemonic War,”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No. 4, pp. 591-613.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nleberger, Charles P.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nleberger, Charles P. 1981, “Dominance and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5, No. 2. pp. 242-54.
- Modelski, George and William R. Thompson. 1989, “Long Cycles and Global War,” Midlarsky, Manus I. eds. *Handbook of War Studies* (A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23-54.
- Nye, Joseph. 2005,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NY: Public Affairs).
- Rajendran, Giri. 2013, “Chinese-US defense spending projections,” *IISS Voices*, Posted on March 13, 2013. <http://www.iiss.org/en/iiss%20voices/blogsections/iiss-voices-2013-1e35/march-2013-6eb6/china-us-defence-spending-6119>.
- Rogin, Josh. 2009, “The End of the Concept of ‘Strategic Reassurance?’” *Foreign Policy*, November 6, 2009.

- Russett, Bruce. 1985, "The Mysterious Case of Vanishing Hegemony; or, is Mark Twain Really Dea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2, pp. 207-231.
- Strange, Susan. 1987, "The Persistent Myth of Lost Hegemo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4, pp. 551-574.
- Strange, Susan. 1988, "The Future of the American Empir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2, No. 1, pp. 1-17.
- Webb, Michael C. and Stephen D. Krasner. 1989, "Hegemonic Stability Theory: An Empirical Assessmen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5, pp. 183-198.
- Yuan, Luo. 2011, "Three Mistakes Will Defeat US's 'Return to Asia' Strategy," China.org.cn, December 11.
- Business Insider*. October 23, 2014, "Here's China's Latest Tactic To Take A Disputed Island Chain From Japan," Jeremy Bender.
- Straits Times*. September 28, 2014. "We're Living in the Most Dangerous Region in the World," Chua Mui Hoong.
- 『경향신문』. 2014년 3월 30일, 오관철, "일, 난징서 30만 전대미문 학살' 시진핑, 독일서 일본 공개비난."
- 『경향신문』. 2014년 8월 26일, 오관철, "양보다 질' 첨단무기 강국 꿈꾸는 중국."
- 『세계일보』. 2013년 11월 26일, 임성준, "제주 이어도 단체, 中 방공식별구역 선포 반발."
- 『아시아경제』. 2013년 9월 20일, 박희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중국의 항모킬러 등 평-21D."
- 『연합뉴스』. 1996년 2월 11일, 李宇卓, "獨島 대치상황과 향후 韓日관계."
- 『연합뉴스』. 2012년 10월 5일, 김호준, "日 순시선 올해 71회 독도 근해 출현."
- 『연합뉴스』. 2014년 2월 24일, 이세원, "노골적 역사수정주의...야스쿠니 전문가가 본 참배."

『한국경제』. 2014년 7월 1일, 서정환, “일 정부, 헌법 해석 바뀌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아베의 마이 웨이.”

『한국일보』. 2013년 8월 5일, 신정훈, “일본, ‘신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 포함 시사.”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is based on the dual instability of bipolar system and multipolar system which have been inherited from the cold war era. As th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seems to appear dynamic system with bipolar, unipolar, and multipolar systems in turn, regional powers are engaging in arms race and hegemony competition, which results in mobility and uncertainty.

Concerning arms race in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weapon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intention is interpreted that China wants to be an efficient challenging power against American hegemony in East Asia with sufficient military power, which ultimately enables China to break through the American containment policy against it. The U.S. has pursued the strong military policy a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to respond the Chinese threat following the precedent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confrontation.

While the U.S. has successfully contained the Chinese expansion by utilizing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China is far short of direct confrontation against the U.S. On the other hand, China has criticized the pivot to Asia policy and re-balancing policy as a American hegemonic policy to contain China by reshuffling the regional order in East Asia.

Keywords: arms race, East Asia, Sino-America relationship, containment, long cycle, hegemonic stability